창원특례시의회
https://council.changwon.go.kr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

봄 / 2026
vol.55

창원특례시의회

제21주년
대마도의 날 조례 제정 기념
조례 제정일 : 2005. 3. 18.
창원특례시의회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
설명절 대비 공직선거법교육
2026. 1. 26.(월) 13:00 의회 대회의실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

한국 해군의 모항이자 전국 최대의 벚꽃도시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벚꽃이 만개한 4월, 진해에서 군악대의 힘찬 마칭 공연과 의장대의 절도 있는 의장 시범이 펼쳐지는 공연으로, 2007년 4월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 시범행사 개최로 시작되어 거리퍼레이드, 프린지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 사진제공 | 창원시청

창원의회소식

열린마당

봄 | 2026 Vol. 55

Contents

02 인사말

04 의원현황

08 의정활동
- 08 주요안건 처리현황
- 14 5분 자유발언
- 27 시정질문 및 답변
- 36 건의 · 결의문
- 72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활동

77 의원동정
- 77 의원연구단체 활동

81 의원칼럼

87 2026년도 회기 운영계획

발 행 인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발 행 처 창원특례시의회 사무국
제작부서 창원특례시의회 의정담당관 홍보팀
주 소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특례시의회
전 화 055)225-5331

창원특례시의회를
만나보세요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어느덧 산과 들에 연둣빛 싱그러움이 짙어가는 만춘(晩春)의 계절, 5월입니다. 생동감 넘치는 이 계절의 기운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마다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우리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을 원동력 삼아 의회에 부여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제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의 임기를 마무리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4대 의회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온전히 닿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더 나은 창원을 만들기 위한 열정과 노력은 진심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제5대 창원특례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며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5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지도로 보는 우리동네 의원

제4대 창원특례시의회 의원 현황(44명)
- 지역구 의원 39명, 비례대표 의원 5명

카 내서읍

이우완

남재욱

타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황점복

서명일

파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손태화

문순규

박승엽

아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김이근

이천수

자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서영권

홍용채

이원주

차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박선애

정길상

전홍표

비례대표

박강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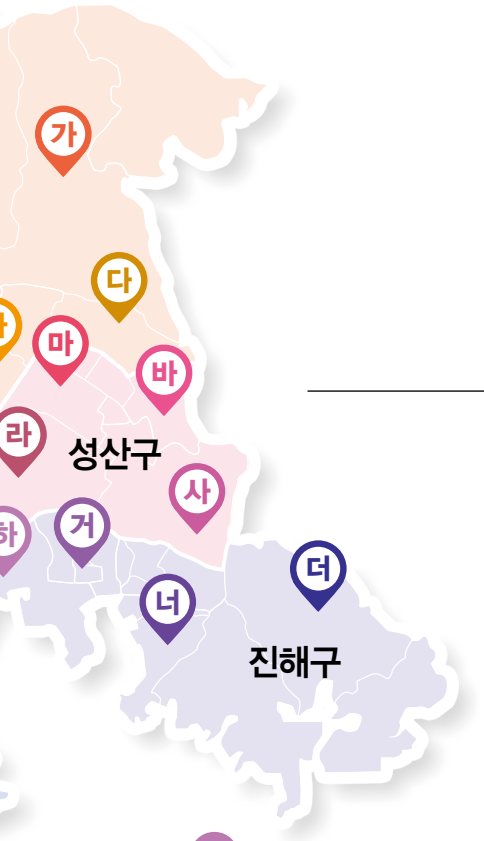
김미나

김수혜

오은옥

진형익

2026. 3. 31.자 기준



가 동읍, 대산면, 북면

권성현

최은하

김우진

나 팔룡동, 의창동

구점득

김혜란

김묘정

다 봉림동, 명곡동

김남수

안상우

라 반송동, 용지동

강창석

박해정

마 중앙동, 웅남동

김경희

이정희

바 상남동, 사파동

한은정

김경수

성보빈

사 가음정동, 성주동

백승규

김영록

하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이해련

김상현

거 경화동, 병암동, 석동

김헌일

정순욱

너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최정훈

더 웅천동, 웅동1·2동

심영석

한상석

의 장 단

의 장

손 태 화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부의장

권 성 현

(동읍, 대산면, 북면)

의회운영위원장

이 해 련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기획행정위원장

박 선 애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산업경제복지위원장

최 정 훈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문화환경도시위원장

정 순 욱

(경화동, 병암동, 석동)

건설해양농림위원장

전 홍 표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의 장

손 태 화 국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부 의 장

권 성 현 국

동읍, 대산면, 북면

국 국민의힘 더 더불어민주당

위 원 회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 원 장	**이 해 련** 국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박 선 애** 국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최 정 훈** 국 이동, 자은동, 덕산동, 풍호동	**정 순 욱** 더 경화동, 병암동, 석동	**전 홍 표** 더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부위원장	**홍 용 채** 국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김 영 록** 국 가음정동, 성주동	**이 우 완** 더 내서읍	**강 창 석** 국 반송동, 용지동	**서 영 권** 국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위 원	**이 우 완** 더 내서읍	**김 헌 일** 국 경화동, 병암동, 석동	**권 성 현** 국 동읍, 대산면, 북면	**한 은 정** 더 상남동, 사파동	**백 승 규** 더 가음정동, 성주동
	최 은 하 더 동읍, 대산면, 북면	**이 해 련** 국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김 경 희** 더 중앙동, 웅남동	**정 길 상** 국 월영동, 문화동, 반월중앙동, 완월동	**심 영 석** 더 웅천동, 웅동1·2동
	남 재 욱 국 내서읍	**김 이 근** 국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홍 용 채** 국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김 경 수** 국 상남동, 사파동	**최 은 하** 더 동읍, 대산면, 북면
	서 영 권 국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이 천 수** 국 구산면, 진동면, 진북면, 진전면, 현동, 가포동	**이 정 희** 국 중앙동, 웅남동	**구 점 득** 국 팔룡동, 의창동	**한 상 석** 국 웅천동, 웅동1·2동
	박 해 정 더 반송동, 용지동	**문 순 규** 더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서 명 일** 더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박 해 정** 더 반송동, 용지동	**황 점 복** 국 회원1·2동, 석전동, 회성동, 합성1동
	김 혜 란 국 팔룡동, 의창동	**김 상 현** 더 충무동, 여좌동, 태백동	**성 보 빈** 국 상남동, 사파동	**김 남 수** 더 봉림동, 명곡동	**김 우 진** 국 동읍, 대산면, 북면
		남 재 욱 국 내서읍	**오 은 옥** 더 비례대표	**김 혜 란** 국 팔룡동, 의창동	**안 상 우** 국 봉림동, 명곡동
		김 묘 정 더 팔룡동, 의창동	**김 수 혜** 국 비례대표	**박 승 엽** 국 양덕1·2동, 합성2동, 구암1·2동, 봉암동	**박 강 우** 국 비례대표
		진 형 익 더 비례대표		**이 원 주** 더 자산동, 교방동, 오동동, 합포동, 산호동	**김 미 나** 국 비례대표

2026. 3. 31.자 기준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149회 임시회 (26.1.20.~1.26.)

7일간 총 20건

의결목록

-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대한민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 〈보 고〉
- 2026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보 고〉

의원발의 조례안 들여다보기

공익 실현 및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

창원시의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안

대표발의 **김미나**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창원시의회의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공익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
- ESG 경영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방의회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공직윤리 의식 강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재욱** 의원

심사결과 수정가결

주요내용

-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심의회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
-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여 위원의 공직윤리 의식 강화

한글에 대한 애정과 관심 향상 및 국어의 올바른 사용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진형익**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한글사랑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장의 책무에 한글사랑 지원사업 추진을 포함
- 창원시 국어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중 한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시 공문서 등으로 확대

공설시장 사용자의 권리 보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재욱** 의원

심사결과 수정가결

주요내용

- 창원시장의 책무를 밝히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창원시장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 조치
-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시행 규정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박해정**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3년마다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
- 여성폭력 예방교육에 성인지 관점을 반영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의 투명성 제고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경희**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의원발의 조례안 들여다보기

창원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적 기틀 마련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성보빈**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창원시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 및 창작 환경 조성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여 창원시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문화적 수요 충족

재단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구점득**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근무형태를 상근으로 한정
- 재단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대표이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

주요안건 처리현황

제150회 임시회 (26.3.5.~3.13.)

9일간 총 32건

의결목록

-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원안가결〉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안 〈원안가결〉
-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낙동강변 갈전제 폐천부지 체계적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 및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원안가결〉
- 국내 낙농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아이세상장난감도서관(마산회원점)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 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0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구축 동의안 〈원안가결〉
-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의견〉
-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 2026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보 고〉

의원발의 조례안 들여다보기

지역산업 구조 다변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상현**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 정착 도모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진형익**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이동과 동반출입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이동권·접근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친화적 도시 환경 조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김수혜**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와 시장의 책무를 정함
-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권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는데 이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및 효율성 개선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문순규**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개정하여 가로구역·사업시행구역 면적 간 상한 일치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기준 면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창원시의 상징이자 자랑인 벚꽃 명소로서 지속

창원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정순욱**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창원시의 벚나무 보호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벚나무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벚나무 보호 및 관리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오은옥**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운영하여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
-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완

의원발의 조례안 들여다보기

시민의 생명 및 신체 보호와 해양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전홍표** 의원

심사결과 원안가결

주요내용

- 수난구호 참여자의 교육·훈련과 시민 해양 안전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어 규정 실익이 낮은 조문 삭제

5분 자유발언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월 20일

오은옥 의원
(비례대표)

잿빛 콘크리트 창원, 아트 횡단보도로 문화산단 도시를 디자인하다!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을 담아 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방안으로 '아트 횡단보도' 설치를 제안한다. 아트 횡단보도는 일반적인 흰색 줄무늬 대신 트릭아트 등 다채로운 디자인을 적용해 시각적인 흥미를 유발하고 주목도를 높여, 운전자의 서행을 유도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횡단보도를 말한다. 아이슬란드, 프랑스, 벨기에, 대만 등 세계 곳곳에서 예술 작품 같은 횡단보도를 볼 수 있다. 창원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성산아트홀과 같은 문화시설 주변은 피아노 건반·음표를 활용하고, 기업·연구 시설에는 전자 회로, 진해군항제 관련 벚꽃잎 등 각 권역과 밀접한 특성이나 정체성을 살려 이미지를 결합할 수 있다. 특히 5개 구별 특색에 맞게 아트 횡단보도를 생활권에 맞춰 차별화시킬 수 있다.

안상우 의원
(봉림, 명곡동)

명곡·봉림 단독주택지 종상향 추진과 인구감소 시대 주거정책의 방향

명곡동·봉림동 지역 단독주택가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창원시는 지난 2024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100%에서 120%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등 개선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시민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용적률 상향 폭이 제한적인 데다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과 연계된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되지 못했다. 따라서 단독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에 대한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걸맞은 교통대책과 생활 인프라 유지·보완 계획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명곡·봉림 지역의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지켜내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비례대표)

창원대로 명칭 '박정희대로'로 명명하는 방안 제안

창원은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계획도시로, 행정 기능의 배치와 산업단지 조성, 도로망과 생활권 구획까지 국가 주도의 치밀한 설계 속에 형성된 산업도시이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는 박정희 정부 시절 호주의 수도 캔버라를 모델로 조성된 국가 산업화전략의 핵심 공간으로, 이는 평가의 대상이 아닌 역사적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조성된 창원대로는 산업·행정·생활권을 관통하는 도시의 중심축이자 국가적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상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원대로를 '박정희대로'로 명명하자는 제안은 정치적 공방이나 인물 미화가 아니라, 창원이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출발하고 형성되었는지를 도시 공간에 기록하자는 문제 제기이다. 세계 여러 도시들이 주요 도로 명칭을 통해 역사적 전환점과 도시의 기원을 남기듯, 창원 역시 정체성과 뿌리를 정확히 기록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과 도시 브랜드가치를 높여야 한다.

홍용채 의원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불 꺼진 도심에 다시 활력을! - 구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촉구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여파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어시장 주변 상권은 낮에도 활기를 잃었고, 밤이면 암흑천지로 변한다. 마산어시장, 수남상가, 정우어시장이 저녁 6시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을 닫고 시민의 발길이 끊기면서 부림시장과 창동, 오동동 상점가까지 그 여파가 번지고 있다. 주민들은 백화점 건물을 공공기관이나 교육·문화 복합공간 등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창원시가 지난해 4월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전담반(TF)을 구성해 놓고도 어떤 의견을 수렴했는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 구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원도심의 흐름을 되살릴 수 있는 퍼즐이다. 따라서 마산의 경제가 다시 힘차게 박동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이해련 의원
(충무·여좌·태백동)

붓, 삭도(손칼), 토기, 칠기가 잠든 땅: 다호리 고분군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결단을 촉구하며

의창구 동읍에 있는 다호리 유적 정비를 앞당기고, 국가적 프로젝트로 격상해야 한다. 지난 1988년 다호리 고분군 발굴 이후 한국 고대사를 새로 쓰게 됐다. 다호리 고분군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창원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의 유물이 나왔다. 다호리 1호분에서 출토된 붓을 근거로 우리 선조가 이미 2000년 전 문자를 기록하고 통치 체계를 세웠음을 보여주는 유물이자 증거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호리의 위대한 유산을 보관하고 전시할 전시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가 창원의 역사를 경시해 온 결과일지도 모른다. 다호리에서 발굴된 유물은 서울과 김해 국립박물관 등으로 분산돼 있다. 따라서 전시관 건립을 앞당겨야 한다. 행정력을 집중해 흩어진 유물들이 창원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전홍표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마산~거제 국도 5호선, '지나는 길'이 아니라 '머무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마산~거제 국도 5호선 도로 사업은 해상 구간에 해저터널만이 아닌 '연륙교'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산~거제를 잇는 해저터널을 지어 '빨리 지나가기만 하는 길'이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연륙교 방식이 마산합포구와 구산면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거가대교'는 개통 이후 거제를 찾는 당일치기 관광객 비율을 2배 이상 증가시켰다. 마산~거제 해상 구간을 해저터널 방식으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연륙교 방식을 창원시와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 연륙교는 전망대, 해상 보행로, 관광 콘텐츠와 결합해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도로가 될 수 있다.

이원주 의원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마산합포구 아동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촉구하며

마산합포구 지역에 대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창원시에는 의창구 1개소, 성산구 2개소, 마산회원구 2개소, 마산합포구 1개소, 진해구 1개소 등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는 인구 규모 대비 진주시(10개소)나 김해시(7개소)보다 적은 것이다. 센터는 숙제 지도, 예·체능 활동, 간식 제공, 등·하교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인프라다. 하지만 구도심·농촌·신도시가 공존하는 마산합포구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리적으로 한쪽 끝에 위치하는 현동에 있어 접근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마산합포구 내 권역별 돌봄거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아동 돌봄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공공 책임이자 미래 투자이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을 촉구한다.

김영록 의원
(가음정·성주동)

창원시설공단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누비콜' 사업은 목적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창원시설공단이 아닌 창원복지재단 업무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창원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제성을 우선하고, 수익성 지표를 포함한 경영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누비콜 사업의 적자가 전체 재정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누비콜 이용객은 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분들로, 수익 창출이 조직의 목적인 곳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렵다. 아울러 현재 창원스포츠파크의 옛 롤러스케이트장 인근에서 운영 중인 무료급식소의 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가 많을 때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창원스포츠파크 운동장 트랙에 비닐하우스 설치도 요청한다. 시민들이 비가 내리거나 추운 날씨에도 안전하게 러닝을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경화·병암·석동)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 결정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최근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 결정과 관련해 창원시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08년 개점한 홈플러스 진해점은 정규직 80명, 입점 업체를 포함하면 500여 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곳이다. 그러나 MBK파트너스의 회생 계획안에 따라 2026년 새해 벽두 폐점이 결정되면서 지역 상권과 고용 인력은 불안과 충격에 휩싸였다. 진해점이 폐점하고 나면 진해구에는 대형 유통매장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에 19만 진해구민은 생필품을 구매하고자 창원, 김해, 부산으로 가야 할 수도 있다. 홈플러스 진해점마저 폐점한다면 지역 상권은 쇠퇴하고, 소비 동선은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이다. 창원시가 이 사태를 방관해선 안 된다. 진해구민의 생활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행정의 책무이다. 창원시의 적극적인 대안을 절실히 요구한다.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월 26일

문순규 의원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양덕2동 일원 중학교 신설 및 양덕2동 청사 건립 재촉구

양덕2동에 중학교와 행정복지센터(청사) 건립이 필요하다. 마산회원구 내 대표적인 밀집 지역인 양덕2동에 아파트 비율이 높고 젊은 세대의 꾸준한 유입으로, 향후 학령기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양덕2동 내 중학교가 아예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양덕중·양덕여중·마산중앙중·무학여중·창신중 등으로 1~3km를 원거리를 통학해야 하므로 중학교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양덕2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이 시급하다. 현재 노후화와 공간 부족도 문제이다. 행정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복지 상담실, 민원 대기 공간, 주민자치 프로그램 공간 등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청사 건립이 필요하다.

박해정 의원
(반송·용지동)

같은 창원, 다른 규제…, 구 창원 단독주택지 차별을 끝내야 합니다

단독주택단지 종 상향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건폐율·용적률 제한을 받는 성산구·의창구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창원시는 지난해 1월 성산구·의창구 배후도시 단독주택지를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그런데도 성산구·의창구 단독주택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100%라는 기존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허용받는다. 따라서 건폐율 60%, 용적률 200% 등으로 규제를 완화한 경기 성남시의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 같은 조례, 같은 세금을 내면서 창원 주민만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천수 의원
(구산·진동·진북·진전면, 현동, 가포동)

창원시 광암항·원전항 소형어선 인양기 증설 및 양식업 관리선 기준 완화 촉구

현재 광암항에는 7.5톤급 인양기 2대, 원전항에는 7.5톤급 1대와 2.8톤급 3대가 설치돼 있으나, 실제 어선의 무게와 구조를 감안할 때 인양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어선은 과거보다 무거워지고 구조도 복잡해졌으며, 어획물 하역에도 대형 인양 장비가 요구된다. 이에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등은 10톤급 인양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광암항과 원전항에도 동일한 인양기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창원시의 양식업 관리선 척수 기준은 5ha 이하 1척, 이후 5ha 초과 시 1척 추가로 제한돼 있으나, 변화된 어업 환경을 반영해 완화가 필요하다.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와 수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 창원시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박선애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행정의 칸막이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다

지난달 발생한 45년된 노후 반월시장 아파트의 천장 붕괴 사고는 행정이 마주해야 할 엄중한 경고이다. 건물 외벽 벽돌이 수시로 추락하고 다수 세대에서 붕괴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비사업은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상가 소유주들의 연락 두절과 행방불명으로 인해 재개발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행정적 지위와 서류상의 요건이 시민의 생명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 창원시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선제적 주거 보호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특히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소유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동의율 확보의 물꼬를 터주는 등 안정 중심의 적극 행정을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심영석 의원
(웅천·웅동1·2동)

진해신항 조성 사업과 안골만 매립면허 효력상실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

진해신항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와 안골만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상실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진해신항은 초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국가 핵심 항만사업이다. 2040년까지 21선석을 조성하고, 18만 7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는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측정기 설치를 통해 피해 최소화 되도록 해야 된다. 또한 주민과 진해신항 개발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 해결, 환경 감시 활동 등으로 상생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어 안골만 매립 효력 상실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 단계까지는 국가 주도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도시계획은 민간 개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남재욱 의원
(내서읍)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에 대하여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세력화·정치화에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오직 공익과 공공성을 중심에 두어야 하지만,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에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공익 활동을 표방하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정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정치 진영의 입장과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이 반복된다면 본연의 역할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일부 단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공적 재정을 지원받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정치적 편향 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끝으로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닌, 시민의 신뢰 위에 서기를 바라는 절박한 목소리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김묘정 의원
(팔룡·의창동)

'누비자', 지속 가능을 위한 노동환경 인프라 개선

창원시 공공자전거 '누비자' 현장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누비자 현장 노동자의 안전사고 위험과 민원 등 고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선 누비자 터미널에 자전거를 회수하거나 분배하는 노동자들이 위험에 처해있다. 작업 특성상 자전거를 실은 차량의 주정차가 불가피한데, 안전한 공간이 없다. 또 3~11월 등·하교 시간대 잇따른 분배 민원은 조급함을 불러일으켜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성산구 상남동 누비자 중앙센터 입지도 문제이다. 자전거 정비 공간이 부족하고, 부품은 마산·진해 지역 창고에 분산돼 있어 정비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센터의 권역별 거점 분산을 검토해야 한다.

김상현 의원
(충무·여좌·태백동)

국제 뷰티행사 통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원시의 전략적 대응 촉구

창원시가 뷰티산업과 연계한 국제행사를 유치하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K-뷰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확산하고 있으며, 단순한 미용을 넘어 관광·소비·콘텐츠 등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오는 3월에는 진해해양공원에서 '제1회 ABIL(Asia Beauty International League)' 행사가 개최 예정이다. 대만, 베트남, 홍콩, 한국 등 4개국이 참가해 아시아 뷰티산업 흐름을 공유하고 교류할 예정이다. 이처럼 의미 있는 행사가 민간 주도로만 준비되고 있는 현실은 아쉽다. 따라서 창원시가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책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정희 의원
(중앙·웅남동)

폐원 어린이집·유치원을 활용한 창원형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제안

저출생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거점형 공동육아나눔터'로 전환하자. 현재 창원시에서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50곳, 유치원은 6곳에 달한다. 저출생으로 보육·교육 시설도 줄어들면서, 육아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불안정한 양육 환경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들고,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폐원 시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관리 사각지대로 인한 안전 우려도 커진다. 기존 보육·교육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창원시가 폐원 시설 활용 방안을 검토해 아이와 부모가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진형익 의원
(비례대표)

경남·부산 행정통합, 박완수 도정은 왜 창원의 미래를 미루고 있습니까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창원시 재도약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기 때 문에 경남도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행정통합 지역에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등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통합특별시 인센티브와 공공기관 이전, 산업 특례가 가장 먼저 적용될 곳은 창원이다. 경남·부산 행정 통합은 곧 창원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그러나 박완수 경남도정이 이를 미루고 있다.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 재정 악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창원시는 신속하게 정부가 제시한 지원 방안을 어떻게 성장 전략으로 만들 것인지 기획해야 하고, 경남도에 결단을 요구해야 한다.

이종화 의원
(이동·자은·덕산·풍호동)

진해권 시내버스 배차간격 개선 및 환승 정류장 환경 정비 촉구

진해권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교통 체계의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우선 창원과 마산으로 출퇴근 및 통학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마산행 직통 노선이 없는 자은3지구와 같은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요 노선을 합리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155번·156번 시내버스와 3006 번 급행버스의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버스 증차 등 탄력적인 운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용객이 밀집하는 장전 환승 정류장 등에 스마트 쉘터와 냉·온열 벤치를 설치하여 열악한 대기 환경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진해권 대중교통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월 5일

진형익 의원
(비례대표)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민 체감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5년 이후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이다. 하지만 공정률 95%에 이르렀는데 2공구 주차장과 인근 주택 간 단차로 인해 사생활 침해 우려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과 기술적 제약으로 구조 변경이 쉽지 않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대안(절토 재검토, 완충녹지, 차폐 구조물 등) 모색과 주민과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행정이 요구된다. 개발사업의 진정한 목적은 주민 삶의 질 향상임을 강조하며, 보완 방안과 향후 조치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사파지구 개발이 신뢰받는 성공 사례로 남길 바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다.

김영록 의원
(가음정·성주동)

기후 위기 시대, 정치와 행정이 먼저 책임져야 합니다. -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구하며

우리는 기후 위기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선거철마다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플라스틱 현수막은 대부분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폐현수막 중 70%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거나 매립되었다. 특히 현수막 소각 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이 발생해 심각한 상황이다. 대안으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를 도입해 기후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창원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 현수막의 친환경 전환은 아직 부족하다. 타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반면, 창원시는 소극적이다. 행정이 앞장서 실질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천수 의원
(구산·진동·진북·진전면, 현동, 가포동)

창원시 어선 복원력 확보 안전장치(빌지킬) 설치 지원 촉구

최근 기후위기로 해상 기상이 불안정해지면서 어업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형 어선은 파랑과 구조 변화 등으로 전복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기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는 사고 이후 대응에 한계가 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빌지킬'은 별도 개조 없이 설치해 횡동요를 줄여주는 구조물로, 어선 전복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창원시는 연안어업이 활발해 어업인의 안전이 곧 지역사회 안전과 직결된다. 어선 구조적 안전 보강은 미룰 수 없는 지자체의 책무다. 창원시는 빌지킬 설치 등 실질적 대책과 경상남도·해양수산부 협력 및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황점복 의원
(회원1·2, 석전·회성·합성1동)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구축과 향후 추진 방향

창원시는 기존 CCTV 관제를 넘어 방범, 교통 등 다양한 도시정보를 통합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려 한다. 현재는 센터와 기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 CCTV도 면적 대비 수원시보다 적어 안전망 확충이 중요하다. 2027년까지 관련 기능을 통합센터로 모으고, 단순 이전을 넘어 데이터 연계 기반의 스마트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주요 간선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CCTV를 대폭 늘리고, 위험상황과 음성 인식, 비상벨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 신설도 요구된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성보빈 의원
(상남·사파동)

창원의 뿌리, 삼원회를 아십니까?

창원의 원주민 단체인 삼원회는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고향을 떠난 원주민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지역 문화 보존에 힘쓰고 있다. 삼원회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문화를 나누고 있지만, 시설과 예산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화장실과 전시관 등 시설 개선, 보조금 현실화,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 창원시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삼원회의 공공적 역할에 걸맞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경상남도 등과 협력해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역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요구된다. 본 의원은 끝까지 이 문제를 지켜보겠다고 약속한다.

박선애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방치된 아동전용시설 초고령시대 복합공용공간으로 활용하자!

창원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저출생으로 아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놀이터가 늘고 있는데, 아동 시설을 줄이는 대신 세대 복합 공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아동과 노인은 안전, 접근성, 신체활동, 사회적 교류 등 공통 요구가 많아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이 가능하다. 낮에는 어르신들이, 방과 후엔 아이들이 이용하는 등 시간대별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다. 복합형 공간엔 운동기구, 그늘막, 녹지 등 다양한 시설과 안전 요소가 필요하다. 이런 공간은 세대 교류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창원시가 시범사업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란 의원
(팔룡·의창동)

사전 검증, 예방 행정, 제도적 전환

공공계약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중요한 정책 행위로, 행정의 신뢰와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창원시는 감사관 소속 일상감사팀에서 계약심사를 병행하고 있으나,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2000만 원 이하 1인 수의계약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사전 단가 검증에 취약점이 있다. 조달 자율화가 진행되면서 지방정부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타 지자체는 계약심사 전담 조직을 통해 예산 절감 등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방대한 계약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계약심사 전담 인력 및 조직, 사전 단가 검증 체계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한다. 조달의 자율성 확대에 맞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김미나 의원
(비례대표)

마산의 상징은 마산에 있어야 합니다

마산은 문화와 예술의 도시로, 가고파국화축제와 조각가 문신 등 고유한 상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상징들은 행정이 아닌, 시민의 삶과 시간이 쌓여 만들어졌지만 최근 행정 통합 명칭 아래 점차 희석되고 있다.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기억 훼손의 시작이다. 통합은 필요하지만, 마산의 상징과 자산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문신은 마산이 낳은 예술가이며, 축제와 비엔날레도 마산의 정신과 기억을 담고 있다. 따라서 문화 명소를 잇는 투어 셔틀을 운영해 마산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다. 시민 모두가 마산의 이야기를 소중하게 지켜가며 온전히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행정이라 생각한다.

김상현 의원
(충무·여좌·태백동)

기초의원의 본질적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지방자치는 제도보다 현장이 우선이며, 그 중심에 기초의원이 있다. 기초의원은 주민의 일상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결정된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변화의 단서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기초의원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단순한 요구 전달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 오늘의 불편만이 아닌 미래까지 내다보는 정책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힘을 가질 수 있다. 의회가 이러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

권성현 의원
(동읍, 대산·북면)

마금산 온천을 활용한 지역거점 치유형 병원 설립 제안

마금산 온천을 활용해 지역거점 치유형 병원 설립을 제안한다. 온천수의 치료·재활 효과는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북면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고령층, 산업단지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의료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치유형 병원이 들어서면 24시간 응급진료와 재활 치료 등 지역 맞춤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는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창원시가 관련 부지 확보와 공공성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서주길 바란다. '북면에 살면 건강하다'는 말이 실현될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정주 의지를 높이는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3월 13일

서영권 의원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

마산 해양·역사 관광 벨트 구축을 제안하며

최근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로 산업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 경쟁력도 문화와 관광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 마산의 해양과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한 '원도심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제안한다. 3·15해양누리공원을 가족형 체험거점으로 고도화해 젊은 층과 관광객 유입을 늘려야 한다. 돝섬, 해양신도시, 원도심을 연결하는 교통과 야간 경관의 개선도 필요하다. 야간 조명 개선과 광장 조성을 통해 머무는 관광이 활성화되고, 활기찬 도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대중교통과 관광 셔틀을 강화해 관광 명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역사 투어 시스템을 도입해 청년층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관광 활성화는 실질적이고 세심한 정책 설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노년층을 위한 파크골프장 등 주민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 결국, 정책 실천 의지가 뒷받침될 때만 진정한 관광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음을 강조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송·용지동)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이전을 재차 촉구하며

경남교통문화연수원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 교통 혼잡 및 주민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다른 지역 연수원들은 모두 도시 외곽에 있으나, 창원만 예외적으로 도심에 남아 있다. 연수원 이전은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숙원 사업이다. 연수원이 이전한다면, 그 부지는 반드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본 의원은 해당 부지에 중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한다. 현재 구 창원지역에는 두 곳의 노인복지관만 있어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복지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고령인구 증가로 기존 복지관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건강 프로그램, 문화 활동 등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이 필요하다. 이제는 연수원 이전은 더 이상 검토의 대상이 아닌, 즉각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에 나서주길 바란다.

김수혜 의원
(비례대표)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도시, 창원을 꿈꾸며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법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창원시 장애인 중 약 45%는 시각, 청각, 언어, 발달, 뇌병변 등 다양한 이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에서 점자, 음성 안내, 수화, 자막 같은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장애 유형을 충분히 아우르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음성이나 수화로도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정보나 지역사회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도구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며, 현재는 AAC 도구와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장애 유형별로 맞춤화된 도구 개발과 예산 및 인력의 확대, 그리고 장애인 가족과 종사자를 위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결국 장애인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홍표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황금돼지섬 돝섬, 복합해양레저&파크골프 타운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돝섬은 황금돼지 전설과 최치원 설화가 깃든 마산 앞바다의 상징적인 섬이다. 시민들에게 소풍과 추억의 장소였던 돝섬이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과거의 유원지로 남을지, 미래 해양레저 중심지가 될지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의원은 돝섬을 '복합해양레저 파크골프타운'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제안한다. 이곳은 도심에서 배로 10분이면 닿을 수 있어 접근성이 매우 좋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복합해양 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 돝섬을 '복합해양레저 파크골프타운'으로 제안할 것을 요청한다. 파크골프장은 관광객의 유입과 마산어시장, 구도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배를 타고 들어가는 전국 유일의 파크골프장이라는 차별화된 강점도 있다. 황금돼지와 해양 경관을 결합해 전국 대회를 유치할 수도 있다. 고령사회 건강 증진, 친환경 생활체육, 해양 관광 활성화 정책에도 부합한다. 돝섬을 미래의 성장 거점으로 변화시켜 창원 해양레저를 열어가자.

문순규 의원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와 디지털 전환 지원체계의 구조적 전환 촉구

창원시의 소상공인들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소비 방식의 변화 등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대형 유통기업과 물류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민들은 가격뿐만 아니라 편리성, 접근성, 속도, 후기, 브랜드 신뢰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소비한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방문이 줄고, 소상공인 매출도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이제 창원시의 소상공인 정책도 보호 중심에서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마케팅, 재무·세무 관리, 시장 흐름에 대한 이해, 성공 사례 공유와 멘토링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다.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교육, 디지털 전환 지원, 청년 인력 연계, 성과 평가, 업종별 지원 같은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시설 지원을 넘어, 사람 중심의 지속 가능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오은옥 의원
(비례대표)

'창고형 약국' 주민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약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근 전국 곳곳에서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확산함에 따라, 올바른 복약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창고형 약국을 두고 약을 단순한 상품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건강과 직결된 전문 서비스로 인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창고형 약국은 대형마트처럼 넓고 다양한 의약품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무엇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어떤 약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고, 오·남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에 창고형 약국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복약지도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약 안전 교육과 홍보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창고형 약국의 확산으로 동네약국이 문을 닫으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지역 동네약국이 공공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지역 보건 안전망이 붕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우진 의원
(동읍, 대산·북면)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2.0의 성공적 추진을 촉구하며

창원국가산업단지는 조성 52주년을 맞아 2500만m^2 부지가 모두 분양되고,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지만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따라서 기존 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방위·원자력 융합 '창원국가산단 2.0'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2025년 K-방산 수출은 30조 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빅4 기업의 1~3분기 누적 수출액도 27조 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국가산단 2.0은 피지컬 AI와 제조 AI가 접목된 지능형 산단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R&D 중심의 연구 거점, 제조 중심의 생산 거점, ICT 융합 첨단화 거점도 확보해야 한다. '국가산단 2.0' 추진 예정지가 지반 안정성 보완 등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오는 6월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사업 선정과 예타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 산단은 창원의 향후 50년 성장 동력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다. 창원국가산단 2.0이 지역의 자긍심과 꿈을 실현하는 견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시정질문 및 답변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특례시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angwon.go.kr)
인터넷방송(5분 자유발언)
또는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3월 10일

전홍표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Q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이유는?

A 해양항만수산국장 사업 협약 의무불이행, 골프장 외 잔여사업 미이행 등이 사유이다.

Q 창원시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A 해양항만수산국장 의무를 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패소 후 소송을 취하했다.

Q 지금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누구인지?

A 해양항만수산국장 경남개발공사가 단독 시행자이다.

Q 창원시는 사업에 어떤 역할로 참여했는지?

A 해양항만수산국장 토지 소유자로서 약 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Q 팔룡터널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창원시의 선택은?

A 시장권한대행 BTO-MCC 방식으로 변경해 초기 수요예측부터 사후 평가까지 공공의 책임 강화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박해정 의원
(반송·용지동)

Q 창원시 재활용처리종합단지 입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A 기후환경국장 대표사 실적 평가가 도입되고, 평가 항목과 배점이 일부 변경되었다.

Q 평가 항목이 자주 바뀌는 이유는?

A 기후환경국장 관련 규정 개정과 안전 기준 반영, 객관적인 자료 확보 때문이다.

Q 산업재해율 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어떻게 보완하는지?

A 기후환경국장 신인도 평가가 목적이며, 필요 시 변호사 자문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Q 정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 것에 대한 공정성은?

A 기후환경국장 평가위원을 약 1000명 중 무작위로 추첨하고, 당일 최종 선정한다.

Q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 진행 상황은?

A 시장권한대행 SK와 단가 협상 등으로 가동이 지연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A 시장권한대행 입찰과 평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정책 책임, 지역 기업 활성화이다.

정순욱 의원
(경화·병암·석동)

Q 진해에 큰 관광 인프라가 생기고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인구와 발전이 정체된 이유는?

A 시장권한대행 경기침제로 인한 문제보다는 오랜 기간 구조적인 제약이 누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Q 위탁사업 관련, 퇴직금 미지급 등의 관련 문제는 왜 보고가 누락됐는지?

A 시장권한대행 담당자가 우선순위를 낮게 판단했거나,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서 보고가 미흡했다.

Q 위험한 옹벽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A 시장권한대행 국토관리청에 보수 요청 중이며, 추가 점검·관리를 협의하겠다.

Q 대야지구 개발과 교통 · 학교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A 시장권한대행 교통영향평가 검토와 학교 신설 또는 증·개축 등 관련 기관과 추가 협의하겠다.

Q 위험한 도로(교차로 등)의 안전대책은?

A 시장권한대행 육교 설치 등 구조 개선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과 대책을 논의하겠다.

구점득 의원
(팔룡·의창동)

Q 진해구 병암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목적은?

A 도시정책국장 노후 주거지역 정비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Q 260억 원 중 상당수가 주차장 사업에 쓰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A 도시정책국장 기반시설 확충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이다.

Q 멀쩡한 한의원 건물을 철거해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 견해는?

A 도시정책국장 시는 필요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Q 병암동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 주차장 위주 투자가 타당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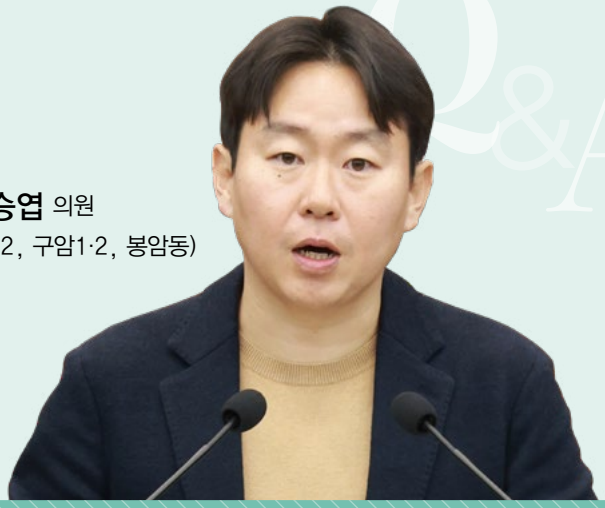
A 도시정책국장 시는 청년들이 기반시설 부족으로 떠난다 판단했다.

Q 공공 인력 배치 및 증원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지?

A 기획조정실장 논란이 있었으나, 시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Q 의회 및 시청 인력, 조직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기획조정실장 창원은 타 지자체보다 업무·환경이 달라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박승엽 의원
(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

Q 창원시 파크골프장 장기 휴장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됐는지?

A 문화관광체육국장 약 10년 전부터 파크골프장이 운영됐으며, 최근에는 구장별로 연간 48~58일 정도 휴장하고 있다.

Q 60일 휴장 기간의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가 있는지?

A 문화관광체육국장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고 있으며, 창원시만의 명확한 데이터 축적은 부족하다.

Q 장기 휴장 일수를 줄일 계획은 있는지?

A 문화관광체육국장 잔디 상태를 보며 데이터에 따라서 조기 개장을 검토하고 있다.

Q 김해 등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때 창원이 더 오래 휴장하는 이유는?

A 문화관광체육국장 창원은 이용객 수가 많아 잔디 보호를 위해서이다.

Q 집회 현수막 관련해 불법 부착이 반복될 때 적극적으로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A 성산구청장 반복적으로 부착되는 경우 행정대집행 조치를 검토하겠다.

진형익 의원
(비례대표)

Q 민주주의 전당 건립공사에서 토사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A 도시공공개발국장 일부 토사가 농지로 반출되었지만, 불법 성토 증거는 없다고 수사 결과 회신이 왔다.

Q 앞으로 토사 처리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A 도시공공개발국장 스마트송장(GPS 기반 앱)을 도입해 토사 반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Q 발생 토사량이 내역서와 실제 반출량이 다르다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A 도시공공개발국장 설계 변경 등으로 실제 반출량이 더 많을 수 있다.

Q 파일공사 과정에서 슬라임토 등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A 도시공공개발국장 토질 성분 검토 결과 실트질 모래로 오염물질은 없었고, 감리보고서에도 문제 기록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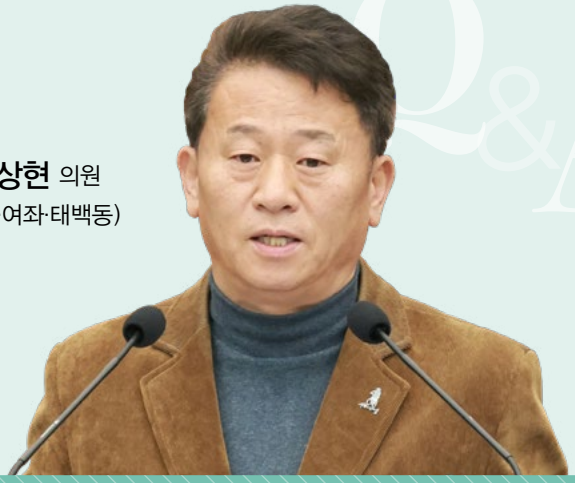
Q 폐기물 배출 신고는 이행됐는지?

A 도시공공개발국장 신고 기록은 없으며, 폐기물 성분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3월 11일

김상현 의원
(충무·여좌·태백동)



Q 충무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경과와 목적은?

A 도시정책국장 진해구 충무동 등에서 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해 250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Q 4차, 5차 고시에서 '변경사항 없음'이라 고시한 이유는?

A 도시정책국장 세부사항 일부 조정·기간 연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Q 고시 날짜가 국토부 승인일과 일치하지 않는데 문제는 없는지?

A 도시정책국장 행정 절차상 선 고시는 불가능하므로 재확인 후 자료로 제출하겠다.

Q 사업 대상 면적이 계획과 다른 이유는?

A 도시정책국장 도로 등 공제되는 부분이 빠져 면적 차이가 발생했다.

Q 경제창업플랫폼에 게스트하우스 계획이 타당한지?

A 도시정책국장 환경 등 용도 변경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Q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지연된 원인은?

A 도시정책국장 예산 증액, 행정 절차, 문화재 관련 허가 등으로 미뤄졌다.

박선애 의원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Q 창원시 지역주택조합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시의 대응은?

A 도시정책국장 위법 시 고발 등 강력 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해 피해를 예방하겠다.

Q 조합원 모집 시 사업 위험성 고지를 강화할 의향은?

A 도시정책국장 공고문에 위험성을 명확히 안내해 피해를 줄이겠다.

Q 구 롯데백화점 건물 방치 해결과 시의 역할은?

A 도시정책국장 민간 주도의 경우 시가 공공지원 하는 방식으로 모색 중이며,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겠다.

Q 평생학습센터 위탁이 특정 단체에 편중된 이유와 개선 의지는?

A 도시정책국장 공정 평가 원칙이나 다양성 확보 필요성을 공감하고, 선정 기준을 보완해 신규 참여를 확대하겠다.

Q 반월시장 아파트의 안전 대책과 시의 재정 지원 여부는?

A 도시정책국장 법적 한계가 있으나 추가 안전점검과 가로정비사업 지원 등을 검토·추진하겠다.

김묘정 의원
(팔룡·의창동)

Q 창원시 통합돌봄사업 준비 현황은?

A 복지여성보건국장 2026년 3월 27일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중이며, 인력 부족 등 현장 애로가 있다.

Q 창원 맘커뮤니센터와 가족센터의 기능 차이는?

A 복지여성보건국장 맘커뮤니센터는 직장맘·대디 대상, 가족센터는 일반 및 결혼 이민자 가정 우선이다.

Q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중복 문제는?

A 복지여성보건국장 미이용 시민 우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Q 읍 · 면 · 동 인력 부족 문제는?

A 복지여성보건국장 통합돌봄 발굴·현장 업무 증가로 증원이 필요하다.

Q 창원레포츠파크 전임 이사장 해임 판결 관련 책임은?

A 감사관 감사관실의 무리한 감사와 부실 책임이 지적되며, 감사제도 보완이 제기됐다.

Q 바우처 택시 문제점과 개선책은?

A 복지여성보건국장 배차 지연·승하차 지원이 미흡이다. 교육 강화와 친절기사 인센티브가 논의됐다.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월 20일

의회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문

최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흉기 난동 사건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피의자는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자로, 범행 당일 오전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을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는 해당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다. 이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한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통보해야 할 의무나 관련 지침이 현행 제도상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피의자는 같은 날 오후 숙박시설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즉, 관련 지침의 부재로 인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경고·구인·유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또는 거주지 상주 등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가 상실된 것이다. 이는 개별 기관의 판단 문제를 넘어, 정보 공유와 예방적 개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행 관리 체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2024년 기준 전국 보호관찰 대상자는 소년 1만 2301명, 성인 3만 3141명에 이르지만,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보호관찰관은 소년 전담 228명, 성인 전담 398명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약 54명,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약 83명을 관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보호관찰 제도가 준수사항 위반 시 다양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이 어려운 실정이며,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밀착관리와 조기 개입 또한 사실상 한계에 봉착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는 위험 신호가 확인되는 순간 즉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침 부재와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국가의 보호관찰 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예방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범죄 혐의로 임의동행·조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법령 또는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

하나.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

하나. 경찰, 법무부 보호관찰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2026년 1월 20일

창 원 시 의 회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월 20일

의회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문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집단폐사의 빈발로 국내 양식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양식장 과밀은 먹이생물 부족과 성장 지연을 초래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육상 오염원 유입과 자가오염은 생산환경을 악화시켜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과도한 부채와 인건비· 전기요금·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 해황 변화에 따른 생산·가격 변동성, 수입산 경쟁 심화까지 겹치며 산업 전반의 경영 위기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체계는 재해 발생 이후 원상복구 중심의 단기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경영 지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양식어가가 폐업을 선택할 때 적용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미비하며, 과밀·저효율 구조가 해소되지 못한 채 피해와 복구 비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양식업의 지속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 복구를 넘어 구조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역의 환경수용력과 반복 피해 실태를 반영하여, 양식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양식장의 폐쇄, 이설, 정비와 시설의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개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해관계자인 양식어가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폐업과 어장 이동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충분한 보상과 지원 없이 감축만을 요구한다면, 양식어가는 생계 불안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과밀 해소와 어장환경 회복 또한 지연될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폐업과 어장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경우, 과밀이 완화되어 생산환경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회복될 수 있다. 반복되는 피해가 줄어들어 공적 재정 부담도 중장기적으로 경감될 것이며, 더 이상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 양식어가에 대한 체계적인 폐업 및 전환 지원은 산업 구조의 정상화와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정부는 1994년부터 연근해어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어선감척을 통해 폐업 지원과 전환 지원을 추진해 왔다. 양식업 또한 과밀과 재해 등으로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만성적 경영 취약성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한계 양식어가가 폐업 또는 어장 이동을 선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과 전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양식업 구조개선과 연계된 폐업지원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현장에서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반복 재해, 과밀, 어장환경 악화 등으로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양식어가가 자발적으로 폐업이나 어장 이동을 선택할 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폐업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폐업지원이 필요한 양식어가가 폐업을 결정할 경우, 폐업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치 보상, 철거·철수 비용, 전업·재취업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폐업지원이 구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조개선 목표와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선정·집행 절차를 표준화하며, 어촌계·수협 등 지역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라.

2026년 1월 20일

창 원 시 의 회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월 26일

의회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문

부설주차장에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차량 이동명령 및 견인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3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3이 2024년 7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령이 시행된 지 1년이 더 지났지만, 장기 주차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스포츠파크 부설주차장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장기 주차 차량으로 점유되면서 시민 불편과 안전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창원스포츠파크 내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 면수는 2,640면이지만 불법 주차 대수가 500대가 넘어 전체 주차 면수의 19%에 달합니다.

이곳에는 화물·버스 등 대형 차량과 번호판이 없는 말소 차량 등 수백 대의 차량이 장기 주차 중이며 이러한 차량은 법령에 명시된 기한인 1개월 도래 전에 차량을 이동시켜 단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기 주차 금지 안내, 계고 스티커 부착 등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고, 단속 인력도 부족하며, 견인 차량 보관 장소의 한계와 비용 부담 그리고 단속에 따라 인근 지역으로 장기 주차 차량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등 행정 절차 이행의 한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장기 주차로 인해 정작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행사 기간에는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거나 화재·구급 차량의 접근이 어려워지는 등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장기 주차 문제가 계속되는 원인은 법령의 적용 기준이 '1개월 이상'으로 지나치게 길고, 과태료 등 직접적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지자체의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제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주차장법」과 「주차장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장기 주차를 방지하고, 부설 주차장을 본래의 기능으로 회복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및 견인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서 15일로 개정할 것

하나. 「주차장법」을 개정하여 장기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2026년 1월 26일

창 원 시 의 회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월 26일

의회

수산양식업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최근 수산양식업 현장은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수하식 패류양식장을 비롯한 노동집약적인 업종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기본적인 양식업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외국인 고용 제도와 관련 법령은 이러한 어업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업현장에서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행정적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톤 이상 관리선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승선 제한이다. 고용허가제(E-9 비자)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20톤 이상의 선박에 승선할 수 없으며, 해당 선박이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E-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만이 승선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문제는 양식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20톤 이상의 관리선은 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어선과는 달리, 양식장에서 작업하는 양식업자 등의 운송, 양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운반, 양식장의 오물 청소 및 해적생물 제거 등을 위한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기준은 양식업의 실질적 운용 방식과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법률적 해석만을 우선시한 결과로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승선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선박의 톤수나 비자 종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양식업의 유동적·복합적 작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제도 설계 전반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같은 구조적 한계는 선박 기준을 넘어,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 관리 체계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양식업은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달리 고정된 사업장에서 정형화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산업이 아니다. 계절, 기상 조건, 양식물의 성장단계, 어장의 지리적 위치 등 자연환경에 따라 작업 장소와 방식이 수시로 변화하며, 이러한 특성은 근무처가 고정된 사업장을 전제로 설계된 외국인 고용관리 제도와

의 근본적인 괴리를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식업 현장에서는 현행 근무처 중심의 고용관리 체계가 실제 작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괴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례가 양식물 채취 작업이다. 패류양식업계에서는 기존 양식업권자가 양식한 양식물을 타 양식어업인 (외국인 고용주)이 소유한 채취선(외국인 근로자 승선)을 이용하여 어선 사용승인을 받고 양식장에서 양식물을 채취하는 방법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업 구조는 외국인 근로자가 허가·등록된 근무처 또는 선박 외의 장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없는 취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유로 행정조사, 시정명령, 과태료, 체류자격 변경·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작업 구조와 현행 제도 간 정합성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일부 어업인은 단속 및 행정처분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고, 외국인 근로자 또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고용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양식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설계와 행정 해석의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예로부터 수산업을 통해 경제적·문화적 혜택을 누려온 나라이며, 지금도 그 중요성은 결코 줄지 않고 있다. 이러한 수산업의 한 축을 이루는 양식산업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제도의 미비와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그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시대 변화와 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부응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양식업 관리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20톤 이상 선박에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승선이 가능하도록 관련 선박 기준을 조정하고, 고용허가제 내에서 양식업 특례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 고용주 사업장 이외 타 양식업권자의 양식장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승선한 관리선(채취선)이 양식업자 등의 운송, 양식물 포획·채취·운반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근무지 이탈로 간주되지 않도록 고용허가제 운영 제도를 개선하라.

2026년 1월 26일

창 원 시 의 회

의회

국립 3·15 민주묘지 국유화를 위한 시유지 매입 촉구 건의문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국립 3·15 민주묘지는 1960년 3·15 의거의 숭고한 민주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시설이다.

3·15 민주 영령들의 희생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었으며, 이 역사적 공간은 국민 모두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국가적 상징이라 할 수 있다.

3·15 민주묘지는 2002년 국립묘지로 지정되어 현재 국가보훈부가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묘역 부지 128,501㎡(38,939평) 전체가 여전히 창원시 소유의 시유지로 남아있다.

이는 국가가 모든 것을 직접 소유·관리 하는 국가 시설이라는 상징성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책임과 위상의 조화 문제를 제기할 여지 또한 잠재적으로 남아있다.

이에 국립묘지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시유지를 국가가 직접 매입하여 완전한 국유화를 실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며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립묘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립 3·15 민주묘지 내 시유지 매입을 위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라.

하나. 국가보훈부는 창원시와 협의하여 토지 매입 또는 국유지 대토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국유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국립 3·15 민주묘지가 온전한 국가 자산으로서 그 역사적·상징적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2026년 1월 26일

창 원 시 의 회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월 26일

의회

선(先)통합도시 사후보완관리체계 마련 촉구 건의문

창원특례시는 지난 2010년 마산·창원·진해 3개 시가 전국 최초로 자율 통합한 실증도시로서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부응하여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통합 당시 정부는 주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창원시에 한시적 재정 인센티브인 자율통합지원금을 10년간 지원하고 2020년 한 차례 연장을 통해 5년간 추가지원을 하였다. 이후 창원시는 재연장을 촉구하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해당 지원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되었다.

통합 15년이 경과 한 오늘의 창원시는 통합 효과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통합 특례가 소멸된 가운데 광역 행정 수요와 지역 균형발전 수요, 대도시 체계 유지 비용 등으로 인해 행정·재정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통합 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구 마산지역은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통합시라는 거대 구조에 묶여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또한 통합 전 국비 지원이 가능했던 시(市) 간 연결도로는 통합 후 내부 간선도로로 분류되면서 막대한 도로망 구축 비용이 시 재정에 전가되는 등 「도로법」상의 제도적 허점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행정 수요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재정적 보완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 지방정부 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지위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포함한 파격적인 지원안을 발표하였다. 국가가 통합을 위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통합도시가 통합 이후 겪고 있는 현실을 재조명하고 보완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통합 정책의 실효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미 통합 과정에서 구조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떠안은 창원시와 같은 '선 통합도시'가 제도적·재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반드시 '사후 보완관리체계'를 병행 마련해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적 책무이다. 정부는 선제적 통합도시가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통합의 역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민의 뜻을 담아 선통합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지속되는 구조적 행정·재정 부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이후를 책임지는 정부 차원의 사후적 제도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광역단체 통합 인센티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통합을 이행한 도시가 소외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체계를 보완하라.

2026년 1월 26일

창 원 시 의 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월 5일

의회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 촉구 대정부 건의문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김해시를 연결하는 동남권 핵심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서, 지역 간 접근성 개선과 생활권 통합,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교통 인프라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착공 이후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20년 낙동강 낙동1터널 지반 침하 사고 이후 복구공사와 안전성 검토 등이 장기화되면서 현재까지 개통이 지연되고 있어, 창원시를 비롯한 경남 동부권 지역의 교통체계 구축과 도시개발 정책 전반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단순한 지역 철도사업이 아니라, 동남권 광역 생활권 형성과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사업 관리 체계와 공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정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반면, 부전-마산 복선전철과 같은 비수도권 핵심 철도 인프라는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국가 교통정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인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대응이라는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비수도권 시민의 이동권과 정주 여건을 후순위로 두는 정책 운영은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 발전의 균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향후 공정 관리 계획과 안전 확보 방안, 단계별 추진 일정에 대해 시민과 지방의회가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복되는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감내해야 할 부담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지연 문제를 단순한 공사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향후 공정 관리 계획, 안전 확보 방안 및 단계별 추진 일정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제시하라.

하나. 낙동강 터널 지반침하 구간의 복구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조속한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라.

하나. 전 구간 개통 이전이라도 기술적·법적 문제가 없는 구간에 대하여 부분 개통 또는 단계적 개통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2026년 3월 5일

창 원 시 의 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월 5일

의회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최근 전국의 의료취약지역에서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창원시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창원시 관내 보건지소 중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야 하는 6곳 중 5곳에서 의과 공중보건의가 결원된 상태이다. 대산면보건지소는 2024년 4월부터, 동읍보건지소는 2025년 4월부터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아 보건소장이 주 2회 원격진료를 통해 간신히 의료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진료의사 및 의과 공중보건의 결원 충원을 위해 2025년 4차 공고까지 진행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2026년 3월 현재까지 재공고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구산면은 2023년 3월부터, 진전면은 2024년 4월부터, 진동면은 2025년 4월부터 의사가 없는 상태이다. 다행히 진북면에는 공중보건의가 현재 재직 중이나, 이 한 명의 공중보건의가 주 1회 순회진료를 진행하여 구산면, 진동면, 진전면 등 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3개 면의 의료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 개인의 선의에 기댄 것일 뿐, 지속 가능한 체계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창원시의 공중보건의 부족으로 인한 현실은 열악하고 애처롭기까지 하다. 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 간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확대되고, 응급 상황에 적기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 특성상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수적임에도 정기적 진료가 중단되면서 주민건강 악화가 우려되며,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 사업 추진마저 곤란한 상황이다.

공중보건의사 수는 전국적으로도 2010년 5,179명에서 2013년 3,876명, 2024년에는 2,865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공중보건의사 감소의 주요 원인은 복무기간에 있다. 공중보건의사

의 복무기간은 군사교육 1개월을 별도로 하고 36개월에 이르는데, 일반병의 복무기간이 18~21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길다. 이에 현역 복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해, 공중보건의사 지원은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1인이 다수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 의료취약지역 특성상 고령 인구 집중으로 인한 만성질환 관리 부담 가중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복무기간 문제와 맞물려 지원을 더욱 기피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원활한 의료 인력 수급을 통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공중보건의사 지원 인구 유인을 위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하나.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료 정책을 추진하라.

2026년 3월 5일

창 원 시 의 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월 5일

의회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선거이며 이는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기에 신뢰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선거의 신뢰성은 투·개표 사무 전체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현행 투표 제도는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로 인해 운영상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에 의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일일이 날인하면서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어기면 당연히 위법이며 무효 투표로 간주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으로 도장의 날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소 수가 적고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하는 등 투표 소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 인쇄 날인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효율을 위해서 법률을 어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한 명이라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 날인을 대행하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인쇄 날인을 고집하고 있고 오히려 인쇄 날인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한다. 이는 대놓고 선거를 형해화하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인쇄 날인은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복사기만 있으면 누구나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에는 숫자가 없어서 복사된 투표지인지 아닌지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고 전자개표기도 중복투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장이 겹쳐서 똑같이 접힌 투표지나 한 번도 접힌 흔적 없는 빳빳한 투표지 뭉치가 개표소에서 발견되는 기현상은 인쇄 날인과 같은 부실하고 위험한 선거 관리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자유대한민국의 선거를 투명성, 검증 가능성, 공정성의 가치로 지켜내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라!

하나.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 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사전투표관리관 대행자 지정 등 원활한 선거 수행을 위해 예산과 선거 사무 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하라!

2026년 3월 5일

창 원 시 의 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월 5일

의회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촉구 건의문

2024년 말 기준 대한민국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2,077개의 어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어촌계장이 어촌공동체 운영과 수산정책 수행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촌계장은 어업권 관리, 수산자원 보호, 재해 대응 및 정부 정책사업 수행 등 어촌공동체 운영의 핵심적 책임을 맡고 있으며, 행정과 어업인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정책 집행 주체로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어촌뉴딜300 사업, 어촌 신활력증진 사업, 해양생태계 복원사업 등 정부 주도의 각종 정책사업이 확대되면서 어촌계장이 수행해야 할 행정·현장 업무의 범위와 책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적 역할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와 지원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은 곧바로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처우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마을 이장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수당과 행정적 지원을 보장받고 있는 것과 달리, 어촌계장은 직무의 공공성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촌계장 책임수당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 어촌계장의 공적 책임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장은 여전히 실질적으로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어촌계장 직위는 책임만 크고 보장은 없는 기피 직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는 어촌공동체 운영의 공백과 국가 수산정책 집행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어촌계장은 단순한 민간 자율조직의 대표자가 아니라 국가 수산정책 수행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주체이며, 어촌공동체 유지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어촌계장의 공적 역할에 상응하는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고 안정적인 어촌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책임수당 지급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더 이상 개별 어촌계나 수협의 자율에 맡길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공공 정책 과제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어촌계장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어촌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어촌계장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어촌계장 책임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어촌계장을 수산정책 수행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교육, 행정지원, 재해 대응 지원 등 종합적인 보호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2026년 3월 5일

창 원 시 의 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월 5일

의회

3·15의거 기념식 대통령 참석 요청 대정부 건의문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합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의 거리에서 평범한 시민과 학생들은 부정선거와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것”이라는 신념으로 일어섰습니다. 총탄과 폭력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그 용기는 결국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결정지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15의거는 해방 이후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자, 국민이 주권자로서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싸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김주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이름 없는 시민들의 희생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한 번의 성취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찰과 계승을 통해 지켜져야 할 살아있는 가치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계엄을 통한 내란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과정을 거쳤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고, 국민 통합과 헌정 질서의 회복을 위해 민주주의의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3·15의거 기념식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을 기리는 국가적 의식입니다. 따라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직접 참석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대통령께서 3·15의거 기념식에 직접 참석하여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되새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 3·15의거 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유산으로 재확인하고,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 수호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정부 차원에서 3·15의거의 역사 교육과 기념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에서 시작된 정의의 외침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3·15의거의 정신을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기리는 것을 넘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다짐입니다.

대통령의 참석은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이자,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 모두에 대한 존중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3·15의거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세워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6년 3월 5일

창 원 시 의 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3월 13일

의회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GSPEL 구축 촉구 건의문

최근 창원에서 제작된 각종 기동무기체계는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K-방산을 대표하는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원산 기동무기체계는 성능과 기술력 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기동무기체계가 수출되는 지역은 영상 50도 이상의 혹서 지역, 영하 40도 이하의 혹한 지역, 모래폭풍이 반복되는 사막 지대, 눈보라와 고습·염분 환경이 지속되는 지역 등 지구상의 극한 기후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조건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실증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극한 환경을 종합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실내에서 통합 시험·실증할 수 있는 연구 기반시설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 체계기업들은 개발 중인 무기체계를 외국 시험장으로 운송하여 실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 부담, 개발 일정 지연, 기술 유출 위험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애로사항을 넘어 국가 방위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이다.

미국은 이미 2012년 디트로이트 아스날에 지상체계 전력·에너지 연구시설인 GSPEL(Ground Systems Power and Energy Laboratory)을 구축하여 혹서·혹한·습도·모래·진동 등 지구상의 거의 모든 환경 조건을 실내에서 구현할 수 있는 시험·실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은 전 세계 작전 환경을 가정한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K-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창원산 기동무기체계가 세계 어느 환경에서도 검증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미국 GSPEL과 유사한 통합 연구·시험·실증 인프라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험시설 건립을 넘어 자주국방 기반 확보와 수출형 방산 R&D 체계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 인프라 구축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한국형 GSPEL 구축의 최적지는 창원이다. 창원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기동시험장과 첨단함정연구센터(동해관), 육군정비창, 해군정비창,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국방 및 에너지·재료 분야 전문기관이 집적되어 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에는 다수의 방산 체계기업과 협력업체가 입지해 있다. 연구개발, 시험, 정비, 생산, 수출이 하나의 도시 안에서 순환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갖춘 곳은 창원이 유일하다.

따라서 한국형 GSPEL은 새로운 산업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창원 방위산업 생태계를 국가 전략 인프라로 격상시키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창원에 한국형 GSPEL이 구축될 경우, 국내 방산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뿐 아니라 국제 인증 경쟁력 확보, 방산 수출 확대, 고급 기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군사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형 GSPEL 구축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대통령 국정과제에 반영하라. 또한 방산 수출 확대 전략과 연계하여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추진하는 국가 인프라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창원시는 한국형 GSPEL 구축을 위한 선제적 준비에 즉각 착수하라. 지역 방산 체계기업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의 논의를 시작하여 구축 필요성과 수요를 구체화하며 이를 창원의 전략산업으로 채택하여 중장기 산업정책에 반영하라.

2026년 3월 13일

창 원 시 의 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3월 13일

의회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건의문

창원 석전동·회성동 일대는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의 상습적인 교통량 과부하와 잦은 사고 발생 등으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지역으로 신규 노선 발굴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회성동에 조성 중인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은 2028년부터 2030년 사이 약 6,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와 13개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으로 2030년까지 이 지역의 교통 수요는 최대 7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주거 기능이 집적된 복합행정타운은 출·퇴근은 물론 상업·교육시설 등으로 인해 교통이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교통망 확충없이 현 상태가 유지될 경우 석전동·회성동 일대는 교통체계에 심각한 병목 현상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회성동에 위치한 창원교도소는 2029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내서읍 평성리로 이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교도소 이전 후 기존 부지는 국유재산 토지위탁산업 선도사업지로 선정되어 개발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해1지선 서마산JCT(분기점)에서 지방도 1030호선 완암IC를 연결하는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총 9.3km,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약 1조 원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창원 지하고속도로는 기존 도로망과는 다른 신규 도로 용량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입주 및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분산·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창원시의 중점 현안 과제인 도심 혼잡 개선, 서마산IC 개선, 봉암교 확장 등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의 입주와 창원교도소 부지 개발이 시작한 이후에야 도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할 경우 입주 초기부터 수년간 극심한 교통정체와 시민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도시 경쟁력과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 지하고속도로는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입주와 창원교도소 부지 개발과 가급적 동일한 시기에 큰 시차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창원 지하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창원의 도시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할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과 지방도 1030호선을 직결하는 지하 간선축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부 교통뿐 아니라 인근 산업단지·물류거점과의 연계성이 크게 향상되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석전동·회성동 일대의 상시적인 교통 혼잡과 향후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입주와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 폭증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 과제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 지하고속도로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부처가 창원 지하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제반 절차와 협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6년 3월 13일

창 원 시 의 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3월 13일

의회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개선을 통한 창원시 구(區) 단위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존망의 위기 앞에 서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89곳을 인구감소지역, 18곳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여 막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총력 대응 속에서도 명백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소멸의 위기를 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통합 창원시의 옛 마산지역인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입니다.

지난 2010년 자율적 통합으로 출범한 창원시는 현재까지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의 인구는 2010년 통합 당시 41만 명에서 2026년 1월 말 기준 35만 명 수준으로 무려 13% 이상 감소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만 2천 명에서 9만 2천 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며 심각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만약 창원시가 통합되지 않고 독립된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남아있었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인구감소지역법)」상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가 '시·군·구(자치구)'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부산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는 인구가 줄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통합 창원시 산하의 '행정구'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아무리 심각해도 심의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과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위반 사항입니다. 「지방분권균형발전법」제48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는"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원시는 국가의 행정구역 개편 정책에 부응하여 전국 최초로 자율 통합을 이뤄낸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국가 정책에 선도적으로 협력한 대가가 오히려 생존을 위한 지원 배제라는 '치명적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잘못된 잣대를 바로잡고, 정책 수혜의 형평성을 회복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창원시의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율 통합 도시가 겪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및 「인구감소지역법」을 즉각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 심사 대상에 '통합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행정구(區)'를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된 창원시(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의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를 직시하고 특단의 대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방소멸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라.

2026년 3월 13일

창 원 시 의 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3월 13일

의회

낙동강변 갈전제 폐천부지 체계적 관리 및 안전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일동리와 갈전리 일원의 갈전제 폐천부지는 「하천법」 및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의 자산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장기간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의 해당 유휴지는 갈대 및 건조 식생이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화재 발생 시 치명적인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올해 2월 대산면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례에서 확인되었듯, 밀집된 갈대 군락은 기상 상황에 따라 화염을 급격히 확산시켜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갈전제 폐천부지는 창원시의 핵심 국가 기반 시설인 대산정수장과 인접해 있으며, 일동리와 갈전리 주거지역, 그리고 대규모 비닐하우스 농업시설과 연접해 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단순한 하천 부지의 소실을 넘어 공공 기반 시설의 마비, 시민의 생존권 침해, 나아가 지역 농업 경제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위험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공공 안전 확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해당 폐천부지에 대한 관리청의 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국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갈전제 폐천부지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실태 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선제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화재의 도화선이 되는 갈대와 잡초 제거 등 긴급 환경정비를 즉시 시행하고, 향후 유사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연중 상시 가동될 수 있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지침을 수립하라.

하나. 해당 대지의 방치로 인한 공공 안전의 위해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국유재산의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파크 골프장 등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 주민 친화적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특히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공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 변경, 일반재산 전환 및 매각 절차를 포함한 행정적· 법률적 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라.

2026년 3월 13일

창 원 시 의 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3월 13일

의회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에 따른 지역 상권 보호 및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최근 대형 유통업체의 구조조정 여파로 홈플러스 진해점의 폐점이 결정되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권 침해와 고용 불안, 상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간 기업의 경영 결정을 넘어, 19만 진해구민의 일상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지역사회 문제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홈플러스 진해점은 2008년 개점 이래 본사 정규직 80명, 입점업체 종사자 포함 500여 명이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 고용의 핵심 현장이다. 그러나 MBK파트너스의 회생계획에 따라 2026년 초 폐점이 결정되면서 해당 근로자들은 졸지에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미 마산 롯데백화점 폐점 이후 지역 상권이 급격히 쇠퇴한 선례가 있음에도 선제적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홈플러스 진해점이 폐점될 경우 19만 진해구민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 진해를 벗어나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며, 이는 지역 내 소비 기반의 붕괴와 상권 전반의 연쇄 침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신항, 신공항, 철도 등 각종 개발 계획으로 미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진해구민에게 이번 사태는 또 하나의 지역 소외로 다가오고 있다.

대형마트 폐점과 같이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정부는 민간 기업의 경영 결정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마산 롯데백화점의 경우 폐점 이후 상권 침체와 도심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부지 활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러한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 홈플러스 진해점에 대해서는 폐점 이전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 주민의 생활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국가와 지방정부가 함께 책임져야 할 행정의 의무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으로 실직 위기에 처한 근로자들의 고용 승계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하나. 대형 유통업체 폐점으로 인한 진해구 상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체 유통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

하나. 기업 회생 절차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협상 및 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홈플러스 진해점 폐점 부지가 장기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시설 유치 등 부지 활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

2026년 3월 13일

창 원 시 의 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3월 13일

의회

지역주택조합 제도개선 및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장기 지연, 토지 확보 실패,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현행 제도는 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국민 재산권 침해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국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사업 추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는 문제, 토지 확보율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 시행사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비리 발생 가능성, 조합 회계 운영의 불투명성과 자금 관리 부실 문제 등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개별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제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 이전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확보를 의무화하고 토지 사용권 확보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 절차를 법제화하라.

하나. 사업 장기 지연 또는 사업 무산 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 분담금 반환 보증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분담금의 신탁관리 등 재산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조합 자금의 부적정 사용과 회계 불투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 회계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 감사 제도를 도입하라.

2026년 3월 13일

창 원 시 의 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3월 13일

의회

국내 낙농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 낙농산업은 수입 유제품 증가, 낙농가 고령화, 환경규제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생산비 상승과 소비 감소로 인한 원유 수급 불균형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낙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료비, 인건비, 전기료, 시설 유지비 등 낙농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낙농가가 받는 원유 납품가격은 이러한 비용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낙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일부 농가는 경영 지속이 어려워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낙농가 수와 사육 규모 감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낙농진흥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낙농가수는 2000년 13,348호에서 2025년 5,313호로 약 60% 감소했으며, 젖소 사육두수 또한 같은 기간 543,708두에서 374,842두로 약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낙농산업의 생산 기반이 장기간에 걸쳐 점차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우유 소비 감소와 시장 환경 변화로 원유 수급 조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유업체와 낙농조합의 경영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원유 생산 기반 약화로 이어져 국내 낙농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산 수입 우유에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입 우유와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유제품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낙농산업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농촌경제를 지탱하는 기반 산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내 낙농산업의 생산 기반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을 지키고 낙농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군 급식·학교 급식·공공기관 급식 등 공공부문에서 국산 우유 소비를 확대하여 누적된 원유 재고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의 소비 확대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하나. 잉여 원유를 활용한 분유·치즈·버터 등 유제품 가공 산업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하라.

하나. 사료비와 각종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낙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경영 안정 지원 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수입 유제품 증가에 대응하여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농가·유업체·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강화하라.

2026년 3월 13일

창 원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 심의의 건',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3건을 심사했다.

2월 25일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3.5.~ 3.13.(9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해련)는'창원시의회 공무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안건 3건을 심사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선애)는 대한민국대도시시장 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창원시 국어 진흥과 지역어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선애)는 창원시 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1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보고받았다.

1월 22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찾아 개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방문해 올해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산업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2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보고받았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순욱)는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문화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순욱)는 「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150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건설해양농림위원회(위원장 전홍표)는 「창원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했다.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26년 학술연구용역 본격 시작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경수)는 3월 4일 창원시 5개 행정구의 기능적 불균형 요소를 분석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창원시 뉴빌리지형 단독주택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연구활동을 추진하면서 통합 이후 16년이 지났음에도 지역 간 차등 요소에 따른 통합의 어려움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지역 간 격차 심화로 인한 시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 구조에 대해 창원시 주요 권역별 특성과 실태, 현황을 문헌연구와 전문가·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고 타 대도시(특례시) 사례 분석을 통해 행정적· 재정적 비효율성 해소 방안을 모색하여 5개 행정구 제도의 효율성과 한계 및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기후위기·그린뉴딜정책연구회(대표의원 서명일)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기후테크 산업 육성 전략'을 연구 주제로 선정했다. 본 연구는 창원시에 적합한 기후테크 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다. 연구회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역의 탄소중립 대응능력이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데 공감했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 제조업과 연계 가능한 기후테크 유망분야를 발굴하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미래일자리연구회(대표의원 진형익)는 2월 24일 지난 4년 동안 미래인재 양성사업 실태조사, 노인 일자리, 신산업(드론산업 지원정책 연구,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창출 연구, 문화산업 육성 연구) 등 관련 연구과제 6건을 수행해 온 정책연구 성과를 제도화하기 위한 심화연구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개별 사업과 부서 단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미래일자리 정책을 조례 기반의 체계적인 정책 구조로 정비하고 국내외 도시의 일자리 정책 제도화 선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창원특례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맞춤형 조례 모델 제시 및 정책 제언을 통해 기존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행정에 지속 가능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2월 27일 지역 실정에 맞는 우수 조례 발굴과 제도 개선 방향 마련을 위해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에 본 연구는 창원시 현행 조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타 지자체에는 있으나 창원시에는 없는 조례를 대상으로 정책 활용 가능한 조례(안)를 선별·구체화한다. 또한 시민들의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올해도'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민생조례 공모전'을 추진하여 창원시의 산업구조, 인구구조, 재정 여건, 중장기 발전 전략과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한 입법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창원특례시도시리브랜딩연구회(대표의원 박승엽)는 2월 27일'창원 도시리브랜딩과 연계된 지역 축제 연구'에 관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청년 주도형 축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회는 청년이 기획과 운영의 주체로 참여한 다른 지역의 축제 사례를 분석하고, 창원형 청년 주도 축제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도시 창원의 특성과 청년 창업·로컬 콘텐츠를 결합한 축제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축제가 청년 유입과 정주 기반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창원의 상징성을 갖춘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 정체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창원특례시의 도시 특성과 청년 문화 특성을 반영한 청년주도형 지역축제 모델(안) 3가지를 제안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정했다.

미래전략산업연구회(대표의원 오은옥)는 3월 5일'창원특례시 미래전략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기업친화형 산업고도화 실행전략 연구'착수보고회를 열고,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시행했다. 연구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 창원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전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제조 중심 산업도시인 창원의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여 첨단 기술 분야와 뿌리산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해 창원에 적합한 미래전략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산업고도화 실행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광정책개발연구회(대표의원 김혜란)는 3월 5일 '창원시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창원시 온천관광산업은 해양·산림·도심관광자원과의 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북면 마금산온천과 마산 양촌온천을 중심으로 한 온천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연구는 온천관광 지역별 여건분석과 실태조사 후 실효성 분석을 통해 체류형 관광 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스포츠 인프라와 연계한 온천 관광벨트 조성, 관광 교통 연계 전략,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이 머무르는 온천관광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연구회(대표의원 박해정)는 3월 6일 '창원특례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분석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공공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공급체계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설립된 지방공공기관이 주민의 세분화되고 다양한 요구에 부응했는지를 진단한다. 이번 연구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및 결산의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창원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구조와 사업 구조를 분석해 재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정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이뤄지면 창원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주민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2026. 1. 10. 창원시보 373호

행정의 연속성은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김미나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비례대표

행정은 특정 개인의 역량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는 하루도 멈추지 않고, 시민의 삶 역시 쉼 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인사이동은 조직 운영상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그 변화가 시민에게 불편이나 혼란으로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행정의 핵심은 누가 맡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업무가 이어지느냐에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는 시장 공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정 자리가 비어 있더라도 시정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험이나 기억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중심이 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은 '사람'이 아니라 '결과'로 체감됩니다. 처리 기한이 정해진 민원 앞에서 업무가 특정 담당자에게 집중되어 있거나, 일시적인 공백으로 흐름이 멈춘다면 그 답답함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됩니다. 그렇기에 행정은 개인의 근무 여부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맡더라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어지고, 필요할 경우 즉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시민은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행정 시스템과 매뉴얼입니다. 업무 절차와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면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행정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는 단순한 업무 전달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책임을 이어가는 과정이며, 기록과 매뉴얼은 그 책임을 제도로 남기는 장치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무원들에게도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됩니다. 개인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행정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은 업무 부담을 줄이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노고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의회 또한 이 과정에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인사이동 이후에도 주요 정책과 민원 처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행정의 연결 고리가 약해진 곳은 없는지 점검하는 일은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는 비판을 위한 지적이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점검입니다.

행정은 눈에 띄지 않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시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그 도시는 안정된 행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연속성과 매뉴얼 중심 운영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차분히 살피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행정,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6. 1. 25. 창원시보 374호

갈등의 강을 건너, 청년이 꿈꾸는 '하나 된 창원'으로

김영록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가음, 성주

희망찬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순유출된 도시 1위가 안타깝게도 우리 창원이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도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도시의 미래인 청년층의 유출이 가장 뼈아픕니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최근 일각에서 다시금 불거지는 마산·진해 분리 주장이 창원의 미래 동력을 분산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산과 진해의 분리를 외치는 목소리의 이면에는 통합 이후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시민들의 상실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통합 탓이 아닙니다. 마산과 진해를 지탱하던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고 새로운 산업으로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겪는 '성장통'이자 과도기적 진통입니다.

현재 마산은 디지털 자유무역의 중심지로, 진해는 동북아 국제물류의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산업의 대전환은 도시가 쪼개져 자원과 역량이 흩어진 상태로는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라, 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100만 시민이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당장의 불만에 편승해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통합이 가져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을 설득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이 가져야 할 진정한 용기이자 책임입니다.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통합과 분리를 놓고 갈등하는 사이 정작 우리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 교육 인프라의 불확실성 속에서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청년들에게 전염병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제가 '창원은 하나'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도시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데 매진하는 이유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과 연계한 새로운 창원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으며 앞으로도 청년 친화적인 창원의 브랜드 구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창원과 마산, 진해 모두 그동안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연대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청년들이 창원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제조의 다음 엔진, 인공지능 전환

오은옥 의원
산업경제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창원은 '제조산업 중심도시'로 1974년 조성된 이래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지금 제조 경쟁력은 설비를 더 들이는 데서만 나오지 않는다. 공정 데이터를 읽고 품질을 예측하며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AI 전환이 생산성·안전·납기를 좌우한다. 여기서 AI는 불량을 미리 잡고, 설비 고장을 예지하며, 위험을 경고하고, 전력 사용을 줄이는 '현장 문제 해결 도구'다.

LG전자 스마트파크에서는 센서 데이터와 디지털 트윈(현실을 가상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을 결합해 부품 흐름이 대형 화면에 '지도'처럼 시각화되고 불량 가능성은 즉시 표시되며 재고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5G 기반 물류 로봇은 최적 경로로 부품을 공급해 정체를 줄이고, AI가 불량을 감지하여 공정시간을 12.8초 수준까지 단축한다고 한다.

창원의 산업 구조는 특히 AI 전환이 절박하다. 기계·전기·운송장비 등 중소기업 협력망이 촘촘해 한 공정의 지연과 불량이 곧 납기 차질로 번지고 거래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즉 AI 전환은 선도기업 몇 곳의 선택이 아니라 협력사까지 함께 움직여야 하는 생태계 과제다. 마침 제조 기반이 밀집한 창원은 현장 데이터가 방대해 AI 학습과 불량 감소, 생산성 향상에 유리하다.

국가의 방향도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과 AI 활용 확산을 정책 목표로 내걸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자체 기획을 바탕으로 솔루션·인프라·인력양성을 묶어 지원한다. 다행히 경상남도는 지난 10월 사업 참여자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업이 있다" 가 아니라 "기업이 도입까지 간다"이다.

창원시는 단순한 안내자를 넘어 길잡이가 돼야 한다. 먼저, 창원 제조기업의 AI 활용률과 준비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현황을 모르면 도입도, 처방도 불가능하다.

둘째, 전환의 성패는 '현장 수용성'이다. 변화에 대한 불안과 저항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창원시는 경영자와 노동자에게 업종·숙련도별 맞춤 교육, 직무 재설계, 업스킬(Upskill)과 리스킬(Reskill)를 통한 재배치를 지원해 "AI가 내 일을 빼앗는다, 시스템 변화는 어렵다"는 두려움을 "AI로 일이 더 안전해지고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확신으로 바꿔야 한다. 국가 지원만으로는 현장의 전환 속도를 보장하기 어렵기에 지자체가 사각지대를 메우는 역할을 해야한다.

셋째,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야 한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재교육·직무전환·현장 컨설팅·인센티브 지원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생산성·불량률·원가·납기 등 핵심성과지표(KPI) 달성 시 추가 보조와 금융 우대를 주는 성과연계형 구조를 마련하면 투자와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AI 전환은 기술정책이자 지역 생존전략이다. 한국 중소제조기업의 공정 AI 도입률은 1%에 불과하다. 지금 시작하면 창원의 제조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미래 농업의 핵심 전략인 스마트농업은 기술 발전만으로는 부족하다. 농촌의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과 고령 농업인 증가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자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며 창원시에 맞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창원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서 조속히 고민해 봐야 할 때이다.

2026. 2. 25. 창원시보 376호

텀블러의 역설, 이제는 시민의 실천으로 깨울 때다

강창석 의원
문화환경도시위원회 | 반송, 용지

어느덧 텀블러는 환경 의식을 증명하는 상징이자 면죄부가 되었다. 그러나 집 안 곳곳에 쌓여 먼지만 맞고 있는 텀블러는 '환경 보호'라는 이름표를 달고도 주인의 손길을 얻지 못한 채 또 다른 쓰레기가 되는 '텀블러의 역설'을 낳고 있다.

2025년 국정감사 자료는 이러한 '그린 워싱'의 민낯을 보여준다. 지난 5년간 정부가 기념품용 텀블러 제작에 71억 원을 쏟아부었으나, 정작 일회용 컵을 얼마나 대체했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부족하다. 텀블러는 최소 130회 이상 사용해야 비로소 환경적 우위를 점하지만, 많은 이들이 세척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소장'에만 그치고 있다.

이런 지점에서 창원시가 2026년 시청, 구청 등에 도입하는 '텀블러 자동 세척기'는 매우 반가운 변화다. 하지만 시스템 구축은 시작일 뿐, 진정한 완성은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창원시가 '자원 순환의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세 가지 실천이 필요하다.

첫째, 시민의 일상적 세척 습관이다. 시가 시청, 구청외에 주요 거점에 세척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시민은 이를 적극 활용해 텀블러 사용을 '불편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가정 내 '잠자는 텀블러' 깨우기다. 시민들은 집 안의 유휴 텀블러를 기부하고 창원시는 이를 활용해 공유 시스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쓰지 않는 텀블러를 도심 곳곳에서 필요한 이가 빌려 쓰고 반납하는 순환 구조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셋째, 참여를 통한 가치 창출이다. e컵 등 앱과 연계해 세척기나 공유 텀블러 이용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지역 화폐로 환원해 시민의 실천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 보호는 공공의 인프라와 시민의 실천이 맞물릴 때 비로소 결실을 맺는다. 2026년 세척기 보급이 기기 설치를 넘어, 창원시민 모두가 '자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주인공'이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거 환경의 내실화와 지속 가능한 정주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며

안상우 의원
건설해양농림위원회 | 봉림, 명곡

도시의 경쟁력은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이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한가에서 결정된다. 창원의 도심을 지탱해 온 노후 주거지들은 오랜 기간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으나, 현재 주택 노후화와 저밀 개발의 한계, 그리고 급변하는 주거 수요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정주 여건의 근본적 개선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필수 과제가 되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양적 확대는 분명 필요하지만, 지방 도시의 입장에서 더 절실한 것은 '지어진 곳에서 어떻게 계속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특히 '2030년 인구 선순환 도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점에서 단순히 아파트를 더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일상 인프라의 질적 혁신'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 사회로 접어들수록 행정 서비스의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효율 중심의 사고가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행정의 역할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고 파편화될수록 공공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버스 노선의 효율적 재편, 생활 편의시설의 스마트화, 보행 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이제 복지를 넘어 생존의 문제다.

주민 수가 감소한다는 이유로 공공 인프라 관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은 주택 공급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 기반을 상실한 '소멸 예정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진정한 행정의 가치는 사람이 줄어드는 곳에서도 주민이 삶의 품격을 잃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서 증명된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자리와 청년 지원, 두터운 돌봄과 고령화 대응, 그리고 포용적인 사회 구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과제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주택'과 소프트웨어인 '인프라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적인 정책들이 단편적인 예산 집행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대책 및 생활 인프라 보완 계획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으로 향하는 시선을 다시 우리 삶의 터전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인구가 줄어도 품격 있는 삶이 보장되는 '품격 있는 도시'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함께 지혜를 모아가는 '상생의 연대'로 극복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6. 3. 25. 창원시보 378호

친환경 교통 누비자, 더 안전한 교통으로 도약할 시기

진형익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비례대표

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공영자전거 '누비자'를 도입해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선도해 왔다. 현재 회원 수는 약 10만 명, 하루 평균 이용자는 1만 2천 명에 이르며, 도입 이후 16년 동안 누적 주행거리는 약 2,000만km에 달한다. 이러한 성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공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누비자는 편의성과 접근성이 뛰어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누비자 이용 시 1km당 100원씩,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혜택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제 누비자는 단순한 보조 이동수단을 넘어 간선급행버스체계(S-BRT)와 연계되는 대중교통 체계의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버스와 자전거를 연계해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를 위해 창원시는 주요 도로뿐 아니라 골목길까지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전거 도로를 꾸준히 확충해 왔다. 그러나 누비자가 교통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 문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도로 여건이 좋은 곳에는 보도와 차도,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다. 자전거 도로는 보통 차도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연석으로 보도와 구분된다. 문제는 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자전거가 차로와 바로 합류하도록 되어 있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야간에는 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구간에서 운전자가 자전거의 합류를 미처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구간에서는 버스 정류소와 자전거 도로가 겹쳐 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는 맨몸으로 충격을 받기 때문에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끝나는 구간에서는 인도와 연결되는 방식 등 안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도심과 같이 도로 폭이 좁은 지역에서는 보도 위에 자전거 도로가 함께 설치되어 있다. 현재는 보도블록 색을 달리해 보행로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고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자전거 통행 구역의 단차를 약간 낮춰 보행 구역으로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하기도 한다. 누비자 본체나 바퀴 색상을 자전거 도로 색과 같게 통일해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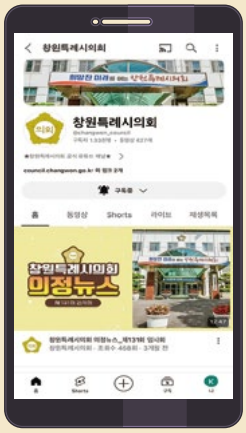
누비자가 창원의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 지금 바로 더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점검해야 할 때다. 시민들이 누비자를 안심하고 탈 수 있는 도시가 될 때, 누비자의 다음 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2026년 창원시의회 회기 운영 일정(안)

회기별		회 기		주요 처리 안건
계		8회 107일		(정례회 50일, 임시회 57일)
임시회	제149회	1.20.(화)~1.26.(월)	7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50회	3.5.(목)~3.18.(수)	14	•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시기, 계획)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51회	4.21.(화)~4.30.(목)	10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52회	7.1.(수)~7.2.(목)	2	• 의장단 선거(7.1.) • 상임위원회 구성(7.2.)
	제153회	7.16.(목)~7.27.(일)	12	•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차 정례회	제154회	9.1.(화)~9.23.(수)	23	• 행정사무감사 • 202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 결산 승인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임시회	제155회	10.19.(월)~10.30.(금)	12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2차 정례회	제156회	11.25.(수)~12.21.(월)	27	•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 • 2027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시정 질문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위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의회는
시민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활짝 열려있습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방청안내

방청안내 일반신청(개인) 회의 개최 전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방청절차 ❶ 방청신청 ▶ ❷ 방청허가 ▶ ❸ 방청권 교부 ▶ ❹ 방청

문 의 의회사무국 055)225-5341

창원특례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

구독

| 지금 이 순간에도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우리 의회 이야기를 의회소식지에서 만나보세요. |